

광남시론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서양의 열강들이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던 시기인 1876년, 일본 시마네현의 현령 '사토 노부히로'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마련한다. 사토는 한반도를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에게 병학을 전수한 인물로 일본 팽창주의의 깊은 뿌리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당시 근대적 서적 편찬을 추진하던 일본 내무성은 1876년 10월 시마네현에 죽도(竹島, 울릉도)에 대한 기록이나 고지도들 조사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의 지적편찬에 관한 질의서를 내무성에 보냈다. 그 내용은 과거 돗토리번의 상인이 막부의 허가를 받아 죽도를 개척했다면서 죽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관할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이때의 형식은 지방정부의 단순한 '질의회식'이었으나 근대 일본이 처음으로 독도를 편입하려고 시도했던 최초의 사건이다.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5개월간 면밀히 조사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 태정관은 1877년 3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하는 지령을 내렸다. 이 태정관(太政官) 지령은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사료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지난 2월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2026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 외무상의 독도방언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고 주한 일본공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했다. 13번째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방언은

일본의 독도 도발과 정부의 대응 전략

새로운 이슈라기 보다는 반복되는 외교현안으로 한·일 간 갈등의 피로도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일까?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자체 내부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많으며 친일인사부터 척결하지 않으면 일본은 계속 독도방언을 되풀이 할것이며 '소귀에 경읽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이 아직도 조선총독부 시절 일분위주의 역사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방언은 지극히 당연하며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일제강점기시절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원활한 식민통치를 위해 한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 그 방법론으로 이병도라는 어문학자를 내세워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역사학계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의 식민사관은 단군왕검의 한민족 국조설을 부인하고 김수로왕과 허황후를 허구 인물로 분류했고, 고대 중국의 한나라가 한반도 북부를 400년간 점령했다는 한사군의 한반도설과 낙랑군의 평양설을 주장하며 아마토 왜가 200년간 한반도 남부지역인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식민사관이 현재 한국의 국가기관에서 까지 침투해 그 위력을 암암리에 떨치고 있다.

윤 정권 때 일제 식민사관을 앞세워 역사관련 기관장을 대부분 뉴라이트 인사로 채웠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일본에 사과를 그만 강요하자'고 말했다. 한민족 독립 운동역사의 정체성을 강조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은 '친일 인사들의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광복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광복과 독립의 의미를 축소하는 발언을 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과거 행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앞잡이처럼 행동 했다. 2008년 동북아역사재단은 국고

47억을 들여 80여명의 역사학자가 한.중.일 역사지도를 그리는 '동북아역사지도사업'을 진행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북한땅에 한사군을 그려놓고 독도는 삭제했다. 광주, 전남, 전북 3개 시도가 24억원을 들여 2018년에 추진한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를 아마토 왜의 식민지로 서술해 발간이 중단됐다. 2021년 문화재청은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하면서 아마토 왜가 369년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라는 식민통치기관을 설치해 562년까지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과 관련된 지명을 사용해 큰 비판을 받았다.

지성의 전당 대학에 침투한 식민사관 또한 심각하다. 일본 전범 극우파인 사사키와 료이치가 만든 '사사키와 재단'은 1995년 한·일수교 30주년을 맞아 거액의 자금을 한국대학에 제공했는데 그중 하나가 연세대에 약 100억 원을 출자에 만든 것이 '아시아연구기금'이다. 고려대는 약 1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사사키와영리리더십학금'을 만들었다. 서울대 이모, 안모 교수는 도요타 재단의 연구비를 받아 일제 지배로 인해 한국이 전후 근대화를 이뤘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폄하했다.

올해 광복 81주년을 맞아 한국은 세계 강대국 순위 6위에 오르는 등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도 일제식민 사관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대통령 직속 '바른역사정립위원회'를 만들어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국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일제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의 역사 왜곡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한민족의 역사로 복원시켜야 한다. 또한,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영무새처럼 망인 철회를 촉구하고 일본 공사를 초치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나 독립기념관과 대학등의 학계에 침투한 일제식민사관 잔재부터 소멸시켜야 할 것이다.

기고

곽춘섭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전남 장애인체육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다

포함해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년 대비 세 계단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성적 향상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도전과 노력의 성과이다.

전남도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취업선수가 연계된 전문체육 육성 효과다. 전남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남지사와 함께 취업선수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전남의 취업선수 비율은 32.6%로, 전국 평균(17.8%)을 크게 웃도는 약 1.8 배 수준이다. 이런 전문체육의 성과는 생활체육의 저변 위에서 더욱 확장된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최근 3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장애인 10명 중 3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참여가 어려운 사각지대와 소외 계층까지 체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도자 배치, 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인클럽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전남도는 장애인 생활체육 전국 성과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생활체육 기반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전문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

하기 위해 전문체육지도자와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전문체육지도자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훈련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곳곳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자가 일상 속에서 체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맞춤형 지도자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은 선수와 참여자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 내 체육 생태계를 충실히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또한 시·군별 번다비 체육관 건립과 접근성 높은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을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누구나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전회위(轉回爲福)의 의미 또한 이 과정 속에서 구현된다. 도전은 개인의 성장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자산이 된다.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을 복지의 보완 영역이 아닌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바라보며, 전문성과 기반을 함께 키우고 장애인의 권리로서 체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스포츠는 기록으로 남지만, 체육은 사람을 남긴다. 성과를 넘어 기반으로, 전남 장애인체육은 흔들림 없게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그것이 지역의 품격을 세우는 길이며,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취재수첩

400억 K-뷰티론... 지역 체감도 살펴야

송대웅

산업부 차장



세계 시장에서 K-뷰티는 이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기둥'이 됐다.

북미와 동남아는 물론, 중동과 남미 시장까지 한국 화장품의 영토가 무섭게 확장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K-뷰티론' 예산을 400억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물 들어올 때 제대도 노를 젓겠다'는 의지로 임하기 때문이다.

사실 중소 화장품 업체에 정책자금은 '생존'의 문제

다. 화장품 산업은 전형적인 선생산 후결제 구조인데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만 개의 발주서를 따내도 당장 원료를 사고 용기 매출 돈이 없으면 남기를 못 맞춘다.

"물건은 잘 만들었는데 돈이 말라 기회를 날렸다"는 현장의 비명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신설된 K-뷰티론 200억원이 단 6개월 만에 동난 것은 업계의 자금 갈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하지만 예산 숫자만 늘린다고 농사는 아니다. 지역 현장으로 내려가면 온도 차가 극명하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고작 9개 기업이 6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한다는 소리다.

천연 원료와 OEM·ODM 역량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들에 1억 5000만원 한도의 지원금은 해외 바이어와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단순히 예산 총액을 자랑할 게 아니라 이런 지역 기업들에게 얼마나 적기에 자금이 수월되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턱은 높다. 서류에 치여 신청조차 포기하는 기업이 없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심사 문턱을 낮추는 '디테일한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K-뷰티의 힘은 단순히 화려한 패키징에서 나오지 않는다.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물건을 보내는 '신뢰'가 브랜드의 근간이다.

정책금융이 그 신뢰의 고리를 잇는 든든한 뒷배가 돼야 한다. 이제는 예산 집행률이라는 숫자에 숨지 말고, 지역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적표'로 증명해야 할 때다.

아울러 자금 집행 속도와 지역별 배분 구조, 사후 관리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그래야 정책이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현장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K-뷰티의 다음 도약은 현장을 읽는 정책의 정교함에서 갈릴 것이다.

사설

'광주·전남통합' 맞춰 무안공항 재개항 시급

여전히 2024년 12월 29일에 멈춰서 있는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이 속도를 낸다고 한다. 이제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장기 폐쇄된 무안공항의 재개항 논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유가족과의 협의를 전제로 오는 7월 재개항을 목표로 정부·공항공사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 무안공항은 여객기 참사 이후 수습 및 조사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3개월 단위로 폐쇄 기간이 연장돼 왔다. 지금도 활주로 공사 등을 이유로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1년 2개월 넘게 서남권 하늘길이 닫히면서 지역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2025년 기준 광주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한 시민은 약 50만명, 김해공항 이용객은 약 2만 명으로 추산된다. 버스나 KTX 등을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데 대기 시간을 포함해 6시간 이상이 소요되면서 시간·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역 여행사들은 거의 고사상태다. 참사이후 호남지역 유일의 국제선 공항이 멈춰서면서 사실상 영업 기반을 잃은 채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1~2인승으로 운영되는 영세 소규모 업체의 경우 급어를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토부 운영 결과 지역 여행업계 피해 규모는 281억 원에 달할 정도다. 이를 포함해 공항 인근 숙박업·관광업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도 지난해에만 1152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무안공항이 재개항하기 위해서는 참사 유가족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유족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물의 결함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직접 안전시설 개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시설의 철거·재설치 공정이 마무리돼야 공항 운영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진상 규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맞춰 무안공항이 명실공히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개항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농어촌기본소득 인구증가에 '효과 있네'

'농어촌 기본소득'의 위력이 나타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안·곡성군에 인구 전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주민에게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들이 농어촌에 계속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해 10월 선정된 신안군은 지난 2월부터, 지난해 12월 추가 선정된 곡성군은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듯 모두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3만8883명이던 신안군 인구는 올해 1월 4만1850명으로 4개월만에 2967명(7.6%)이나 증가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구가 3만8133명에서 3만8221명으로 88명(0.2%) 늘었던 것에 비교하면 놀랄만한 증가율이다.

곡성군도 지난해 9월 2만6597명에서 올해 1월 2만7426명으로 829명(3.1%) 늘었다. 1년 전 같은 기간 2만6638명에서 2만6548명으로 90명(0.3%) 감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에다 군 재원으로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신안군은 햇빛연금까지 더해지면 시 인구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1월 3만8221명이던 인구가 올 1월 4만1850명으로 1년만에 3629명(9.5%)이나 급증했는데 이는 전남 22개 시·군중 인구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이다. 같은 기간 전남 인구는 178만7592명에서 177만9135명으로 8457명(0.4%) 줄었다.

여기에는 '햇빛연금'과 문화·정주 정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햇빛연금을 도입한 2023년, 신안군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179명, 2024년 136명 늘어나는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시범지역 선정된 이후 40여일만에 1789명 증가하는 등 전입이 급증했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혜택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이 제도가 지역 경제·인구 활성화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급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진부 370-7050	논설실 370-7200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